

2023년 1월 14일 시행

제29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번호	
성명	

【인문사회계열 : 선택과목】

	선택과목 (1)	선택과목 (2)	선택과목 표기 (○)
1	행정학	민법총칙	
2	행정학	형사소송법	
3	행정학	경제학	
4	행정학	소방학개론	
5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6	민법총칙	경제학	
7	민법총칙	소방학개론	
8	형사소송법	경제학	
9	형사소송법	소방학개론	
10	경제학	소방학개론	

※ 안내사항

1. 원서접수 시 선택한 선택과목 (1), 선택과목 (2)를 “선택과목 표기”란에 ○ 표기해 주십시오.
2. 원서접수 시 선택한 선택과목 순서대로 답안지가 채점되므로 시험지와 답안지의 선택과목 (1), 선택과목 (2)의 순서가 동일한지 확인해 주십시오.
3. 선택과목의 페이지 수를 확인한 이후에 문제를 푸십시오.

※ 본 시험지는 총 34 페이지입니다.

행정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1 ~ 6 페이지 (총 6 페이지)	7 ~ 13 페이지 (총 7 페이지)	14 ~ 25 페이지 (총 12 페이지)	26 ~ 29 페이지 (총 4 페이지)	30 ~ 34 페이지 (총 5 페이지)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 행정학 】

1. (가)~(다)에 해당하는 공무원 인사이동으로 옳은 것은?

(가) 동일 직렬, 동일 직급 내에서 보직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나) 인사관할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이동시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 상이한 직렬의 동일한 계급 또는 등급으로 수평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나)	(다)
①	전직	전보	전입
②	전직	전입	전보
③	전보	전입	전직
④	전보	전직	전입
⑤	전입	전직	전보

2. 다음의 역사적 배경하에 등장하게 된 행정이론이 아닌 것은?

- 1930년대의 뉴딜정책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정부의 역할과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관료의 재량권도 증가하게 되었다.
- 행정부의 정책 입안 기능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정치와 행정의 구분은 비현실적인 것이 되었다.

- ① 정책과학
- ② 신행정학
- ③ 공공선택론
- ④ 발전행정론
- ⑤ 비교행정론

3.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보 기〉

- 신제도주의 학파는 경제학의 거래비용 개념을 토대로 제도 변화의 동태적 과정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 신제도주의는 구제도주의보다 제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
- 뉴거버넌스는 참여와 네트워크보다는 시장 중심의 가격이나 경쟁에 기초한 조정방식을 강조한다.
- 뉴거버넌스에서 네트워크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하여 중간조직에 의한 문제 해결을 지양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 신제도주의는 개인의 행위결과가 개인의 선호 체계의 직선적인 연장선상에 있다고 가정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ㄷ, ㄱ

4.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평가성 사정(evaluability assessment)은 총괄평가 이후에 이루어진다.
- ② 정책과정상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확보하는 것이 그 목적 중 하나이다.
- ③ 정책평가연구는 순수연구라기보다는 응용연구라고 할 수 있다.
- ④ 정책영향(policy impact)은 정책산출(policy output)이나 정책성과(policy outcome) 이후에 나타난다.
- ⑤ 기준에 따라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형성평가와 총괄평가, 과정평가와 결과평가 등으로 나뉜다.

5.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권성, 유연성, 변화에 대한 신속한 반응을 특징으로 한다.
- ② 전문성에 따른 수평적 분화는 높지만 수직적 분화는 낮다.
- ③ 표준화된 규정이나 규칙이 적어 공식화 수준이 낮다.
- ④ 매트릭스 구조, 태스크 포스, 사업부제 구조 등이 여기에 속하는 조직형태이다.
- ⑤ 계층화 수준이 낮은 탈관료제 조직이어서 복잡성의 수준도 낮다.

6. 중앙정부의 예산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예산의 배정에는 정기배정, 수시배정, 조기배정, 당겨배정, 감액배정 등이 있다.
- 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반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ㄷ.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 ㄹ. 세출예산의 재배정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배정한 예산을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무관별로 다시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7. 「지방자치법」상 집행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인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③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는 사무의 위임·위탁, 직원(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제외)에 대한 임면, 선결처분 등이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교육훈련기관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8. 행정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응적(responsive) 책임은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 ② 도의적(responsible) 책임은 정부가 국민의 수임자(受任者)로서 지는 것으로, 가장 광범위한 차원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 ③ 프리드리히(Friedrich)는 관료들이 책임있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요소보다 제도적 장치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④ 내적 책임은 행정조직이나 공무원이 상급기관이나 상관에 대해 지는 책임을 말하며, 외적 책임은 입법·사법·국민 등에 대해 지는 책임을 말한다.
- ⑤ 파이너(Finer)는 관료들은 외부기관으로부터 통제가 약화되면 권력을 남용하기 쉽기 때문에 사법·입법 등의 외부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9. 정책순응(policy complianc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내면적 가치관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행태 차원의 개념이 아니다.
- ② 정책순응에 수반하는 부담으로 인한 불응의 대책으로는 보상이 효과적이다.
- ③ 정책집행자나 집행을 위임받은 중간매개집단은 정책순응의 주체가 아니다.
- ④ 정책대상집단의 불응은 규제정책보다 배분정책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 ⑤ 정책집행과정에서 모든 참여자가 완전하게 순응하면 정책결정자의 원래 의도가 보장된다.

10. 탈신공공관리론(post-NP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구조를 분절시킨다.
- ②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③ 정부의 전체적인 통제기능을 약화시켜 분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④ 공공서비스의 전달 방식으로 민간-공공부문의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 ⑤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운영에서 자율성을 전적으로 보장한다.

11. 로위(Lowi)의 정책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한다.
- ②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은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니며, 누진세와 사회보장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 ③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은 한정된 자원을 여러 대상에게 배분하는 것이므로 소위 갈라먹기 다툼(pork barrel)을 특징으로 한다.
- ④ 구성정책(constitutional policy)의 대표적인 예로는 징병, 과세, 토지수용 등이 있다.
- ⑤ 최초의 분류 때 구성정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12.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직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 ②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 ③ 별정직공무원은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 ④ 특정직공무원은 법관, 검사, 경호공무원 등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 ⑤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할 수 있다.

13. 프렌치와 레이븐(French & Raven)의 권력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준거적 권력은 조직의 공식적인 권력체계 내에서만 발생한다.
- ② 전문적 권력은 직위와 직무를 초월하여 조직 내의 누구나 가질 수 있다.
- ③ 합법적 권력은 권한(authority)과 유사한 개념으로 조직 내 직위와 직무에 기반을 둔다.
- ④ 강압적 권력은 다른 사람을 처벌하거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을 둔다.
- ⑤ 보상적 권력은 보상의 제공능력에 기반을 두는데, 보상의 예로는 봉급, 승진, 직위 부여 등이 있다.

14. 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유의 법인격과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 ②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중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③ 주민의 직접 통제와 참여, 그리고 책임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 ④ 대표적인 예로는 지방국세청, 지방환경청,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있다.
- 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확대는 국가사무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저해한다.

15. 예산결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체주의(synopticism)는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가능한 모든 대안을 종합적으로 도출하려고 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의 재검토를 중시한다.
- ② 점증주의(incrementalism)는 예산결정이 전년도 대비 소폭의 증감에 그친다고 보고, 이해당사자들의 상호 조절(mutual adjustment)을 중시한다.
- ③ 다중합리성이론(multiple rationalities budget theory)은 예산과정의 단계별로 경제적·정치적·사회적·법적 기준 등 다양한 측면이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 ④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은 관료를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기적인 주체로 가정하며,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모형이 여기에 속한다.
- ⑤ 단절적 균형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은 예산의 배분 형태가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점진적 변동에 따른 안정을 다루지 않는다.

1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에 해당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세원(稅源)을 법률의 근거 없이 독자적으로 발굴할 수 없다.
- ③ 보통교부세는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데에 목적을 두며, 재원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재원의 성격을 갖는다.
- ④ 국고보조금은 국가사업이나 지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며, 재원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특정재원의 성격을 갖는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규제의 수행 주체에 따라 직접규제, 자율규제, 공동규제로 나뉜다.
- ② 관리규제는 과정이 아닌 수단과 성과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제약한다.
- ③ 경제규제의 예로는 진입규제, 가격규제, 품질규제, 물량규제 등이 있다.
- ④ 네거티브규제는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해주는 측면에서 포지티브규제보다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⑤ 사회규제는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인 및 기업의 사회적 행동에 책임과 부담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18. 다양성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양성관리의 대상이 되는 다양성은 가시성과 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 ② 문화적 동화주의에 근거한 멜팅팟(melting pot) 접근과 문화적 다원주의에 근거한 샐러드 보울(salad bowl) 접근이 있다.
- ③ 공무원 임용에서 사회 내 주요 세력의 인적 구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대표관료제의 가치를 부정한다.
- ④ 고용평등정책(equal employment opportunity)은 소외집단의 공평한 임용을 저해하는 장벽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둔다.
- ⑤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는 그동안 불평등을 받아온 집단에 대한 고용평등의 결과까지 보장하는 것이다.

19.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②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③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④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 징계에 속하지 아니한다.
- ⑤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20. 행정가치 중 본질적 가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공익의 추구
- ② 민주적 의사결정
- ③ 평등한 가치 배분
- ④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 ⑤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직업선택의 자유

21.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은 두 개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허즈버그(Herzberg)의 동기요인에는 성취, 인정, 책임감 등이 있다.
- ③ 브룸(Vroom)의 VIE이론은 유인가, 도구성, 기대치를 동기부여의 중요 구성요소로 본다.
- ④ 해크먼과 올드햄(Hackman & Oldham)은 직무수행자가 친교욕구, 권력욕구, 성취욕구를 모두 충족할 때 동기유발이 된다고 본다.
- ⑤ 매슬로(Maslow)의 욕구계층제이론은 하위 욕구가 최소한 어느 정도 충족될 때 상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22.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지적 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
- ② 예외 관리(management by exception)
- ③ 이상적 영향력(idealized influence)
- ④ 영감적 동기부여(inspirational motivation)
- ⑤ 개별적 배려(individualized consideration)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라 구분된다.
- ② 공기업에는 시장형과 준시장형이 있고, 자산규모는 두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의 하나이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 ④ 준정부기관에는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이 있고, 기금관리형에는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도 포함된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24. 중앙정부의 예산과 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2006년에 제정된 「국가재정법」은 예산과 기금을 함께 규율하고 있다.
- ② 특별회계와 기금의 공통점은 특정수입과 특정지출의 연계, 법률에 근거한 설치 등이다.
- ③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설치할 수 있다.
- ④ 기금운용계획(금융성 기금 제외)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30% 이하인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
- ⑤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한 기금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의결 및 결산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25. 정책과정의 참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식적 참여자에는 입법부, 대통령, 행정기관, 사법부 등이 있다.
- ② 정당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정책의제설정 및 정책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③ 대통령은 헌법기관 구성 등 제도적 권한인 공식적 자원과 국민의 지지 등 비공식적 자원을 갖는다.
- ④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형성에 대하여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의 형태로 대응하기도 한다.
- ⑤ 전문가, 학자, 관료 등이 의견교환을 하는 정책공동체는 이슈네트워크보다 느슨하게 연결된 집단이다.

【 민법총칙 】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본인을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그 무권대리 행위의 주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약정을 한 자가 그 약정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③ 아파트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수분양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④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신의칙의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 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해당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2.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②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신이 성년자라고 거짓말 하면서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법정대리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③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그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미성년자 甲과 거래한 상대방 乙이 행위능력자가 된 甲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확답을 촉구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확답을 촉구하였고 그 확답에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3. 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②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 ④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 그 변경은 불가능하다.
- ⑤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4.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이를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다.
- ② 단체의 실질이 사단이라고 볼 수 있더라도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를 위한 소송을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
- ④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 ⑤ 비법인사단의 대표가 직무 범위 외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직무 범위 외의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 ②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③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으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④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그 제한을 악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요기관으로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6.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된 해산사유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이사회결의
- ㄴ. 법인의 목적달성
- ㄷ. 설립허가의 취소
- ㄹ. 존립기간의 만료
- ㅁ. 파산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ㄹ, ㅁ
- ④ ㄷ, ㄹ, ㅁ
- ⑤ ㄴ, ㄷ, ㄹ, ㅁ

7.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독립한 물건은 동산이 아닌 경우에도 종물이 될 수 있다.
- ②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상호간에 유추적용되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당연히 양도된다.
- ③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한 수확기의 단년생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경작자의 소유이다.
- ④ 집합물도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전부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⑤ 임야에 있는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석불은 임야와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8.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
- ②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 ③ 특정 거래에서 활용되는 가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므로 주소의 일종이다.
- ④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현재지를 주소로 본다.
- ⑤ 자연인의 「민법」상 주소는 주민등록지로 본다.

9.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비진의표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발생한다.
- ②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③ 비진의표시에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법률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표시라고 할 수 없다.
- ⑤ 계약 내용이 계약체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계약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면 비진의표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10.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 ②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 ③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면 소멸한다.
- ④ 대리인이 행한 매매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⑤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주인을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그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도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1.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 ②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③ 사실행위는 기본대리권이 되지 않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 ⑤ 표현대리가 성립할 경우,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12.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권한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 ③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④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 ⑤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나, 제삼자에 대하여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없다.

13.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여계약과 같이 대가적 출연행위가 없는 법률행위에는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의 판단에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
- ③ 무경험은 어느 특정 거래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주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1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의사표시가 보통우편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없으므로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도달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③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그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
- ④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 ⑤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15.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법률행위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 ②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무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으로서 어느 법률행위가 이에 위반되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④ 민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한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⑤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실제 거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기재한 것만으로는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16. 乙은 甲으로부터 부동산 X를 5,000만 원에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지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丙은 X의 이중매매를 적극 요청하여 1억 원에 X의 매매계약을 甲과 체결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였다. 그 후 丙은 丁에게 2억 원에 X를 매도하고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 의무는 이행지체로 되고, 그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丁이 丙과 X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丙이 X의 적법한 소유권자라고 믿었고 그러한 믿음에 과실이 없었다면, 丁은 X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 ㄷ. 甲과 丙 사이의 X에 관한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ㄹ. 丁이 X의 소유권을 근거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乙에게 X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乙은 甲과 丙 사이의 X에 관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丁에게 항변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17. 甲이 그 소유의 건물 X를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허락이 있으면 乙은 甲을 대리하여 X의 매수인을 乙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乙은 X의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없다.
- ③ 甲의 乙에 대한 대리권 수여행위는 법률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명시적인 의사표시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 ④ 만약 乙이 본인의 이름으로 丙과 체결한 X의 매매계약이 사기나 강박에 의해 체결되었다면, 그 취소권은 乙이 행사한다.
-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사망하면 乙의 상속인이 乙의 대리권을 승계한다.

1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토지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그 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③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에 표시자의 과실이 있으면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④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⑤ 의사결정의 동기가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켰더라도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의사표시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는 취소할 수 없다.

19.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혼동
 ㄴ. 경개
 ㄷ. 이행의 청구
 ㄹ. 담보의 제공
 ㅁ. 전부나 일부의 이행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ㄹ
- ④ ㄷ, ㄹ, ㅁ
- ⑤ ㄴ, ㄷ, ㄹ, ㅁ

20.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건은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므로,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법률행위의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 ③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불확정기한이 도래한다.
- ④ 기한이익의 상실 특약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인지 또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인지 불분명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 ⑤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21.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②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익일부터 기산한다.
- ③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 ④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⑤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22.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그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 ② 법정대리인이 하는 주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 ④ 취소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취소자가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한다는 의사가 드러나면 족한 것이므로 취소원인의 진술 없이도 취소의 의사표시는 유효할 수 있다.
- 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23.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보증인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 ②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더라도,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 ③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으나, 후소 법원은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의 구비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
- ④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가 지며, 그 주장책임의 정도는 중단사유에 속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주장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⑤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승인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한다.

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멸시효는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② 채권은 1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된 때에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
- ③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당시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 ④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인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공사채권만을 의미하고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⑤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란 상품의 매매로 인한 대금 그 자체의 채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품의 공급 자체와 등가성 있는 청구권에 한하지 않는다.

25.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②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 ③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모두 법원(法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④ 승인된 관습법이라도 사회의 기본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해 그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서의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 ⑤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 형사소송법 】

1. 소송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압수·수색영장이라도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발부된 것은 적법·유효하다.
- ②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하다.
- ③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그 공소장을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 없다.
- ④ 송달명의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날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의 송달서류가 송달명의인의 종전주·거소에 송달되었다면 체포 또는 구속된 시각과 송달된 시각의 선후와 관계없이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⑤ 법원이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등사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지 못하였다면 변론종결 이전에 열람·등사를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더라도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2. 변호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속전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변호인과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의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
-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
- ③ 변호사는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고,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3. 수사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으며 1차적 수사종결권이 있는 반면 검찰청 직원인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에 대해 수사보조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 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은 수사대상범죄가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로 한정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③ 「공직선거법」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선거범죄에 관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제외하고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고소 및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소권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참고인 진술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도 고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 ②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
- ③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고발을 받아 수사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고소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에서 종전의 제1심 공소기각판결이 파기되고 사건이 제1심 법원에 환송된 후 다시 진행된 제1심에서 판결선고 전에 고소가 취소되었더라도 고소취소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친고죄의 경우 양벌규정은 당해 위법행위와 별개의 범죄를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행위자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하지 않는다.

5.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하며 그 영상 녹화물은 본증이나 탄핵증거 또는 기억환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락한 경우에는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해야 하나 법적인 상담을 위한 메모까지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불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수사절차의 개시부터 재판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변호인을 옆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6. 체포 및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술거부권을 알려 주어야 한다.
- ②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별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촉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 ③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이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 ④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긴급체포하지 못하나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때에는 다시 체포할 수 있다.
- ⑤ 구속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7. <보기>의 설명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ㄴ.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면 그 변호인에게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할 필요는 없다.
- ㄷ.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가 아니라 제3자인 경우에도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ㄹ.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다.
- ㅁ.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하고,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나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그 위법성은 치유된다.

	ㄱ	ㄴ	ㄷ	ㄹ	ㅁ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8. <보기>의 설명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한 수출입 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로서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 ㄴ.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 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 ㄷ.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다.
- ㄹ. 수사기관이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설치·이용하여 피의자의 행동과 피의자가 본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PC) 화면내용을 촬영한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영장 없이 이루어져도 정당한 것이다.
- ㅁ.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ㄱ	ㄴ	ㄷ	ㄹ	ㅁ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9. 수사상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물건·장소는 물론 사람의 신체·사체도 검증의 대상이 되며, 신체의 내부도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재연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러한 기재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 ③ 강제체혈과 강제체뇨 모두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지만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이때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해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시행된 것이라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해당하고,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실황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⑤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라고 할 수 있다.

10. 공소장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② 공소제기된 장물취득의 점과 실제로 인정되는 장물보관의 범죄사실 사이에는 법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으나 공소사실의 변경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장물보관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였더라도 이를 곧바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④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였다면, 공소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에 한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1. 공소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적법한 공소제기로 볼 수 없다.
- ②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특정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공소장 기재는 적법하다.
- ③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는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 ④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이 허가된 때에는 그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닌 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⑤ 제1상습사기범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다시 행해진 제2상습사기범죄에 대하여 기소되었으나 종전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제2상습사기범죄에 대한 공소제기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12.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판준비절차의 활용 여부는 수소법원의 판단에 따른 임의적 절차이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절차이다.
- ② 공판준비기일은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하는 것이 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결한 공판준비기일을 재개할 수 있다.
- ④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
- ⑤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13.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다면,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 고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더라도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다.
- ②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자백에 따라 사건을 간이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 ③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정식의 증거조사방식에 의하지 않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간이공판절차에서 증인신문은 교호신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고,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있다.
- ⑤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있지 않는 한 전문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14.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선서무능력자가 한 선서는 효력이 없으나 증언 능력이 있는 한 증언 자체의 효력은 변함이 없다.
- ㄴ.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 거부권이 인정된다.
- ㄷ. 검사가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면 그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더라도 유도신문에 의한 주신문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 ㄹ.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5.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몰수·추징의 대상 여부, 추정액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ㄴ. 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인정은 그것이 경험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 ㄷ. 사법경찰관(조사자)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 아닌 타인(원진술자)을 조사한 후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더라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을 증거로 할 수 있다.
- ㄹ.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ㄴ.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여 그곳에서 20m 떨어진 피의자의 집으로 가서 집안을 수색하여 칼을 압수하였으나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으면 이 칼은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압수조서 및 목록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 ㄷ. 제3자가 대화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ㄹ.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 ① ㄱ ② ㄴ, ㄷ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7.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피의사실은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경우 그 자백은 기망에 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법정에서도 같은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③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와 피고인의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여 그 자백의 임의성 있는 것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자백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8.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
- ㄴ.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 ㄷ. 일본 세관서 통괄심리관이 작성한 필로폰에 대한 범칙물건감정서등본과 분석회답서등본
- ㄹ.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내용
- ㅁ.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 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19. 증거동의를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는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
- ②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 ③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인 경우, 피고인이 그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증거동의를 간주되며, 피고인은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없다.
- ⑤ 상해죄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비진술 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제1심 공판정에서 증거동의를 하였더라도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한다면 그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20. 공동피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파기의 이유가 상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된다면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②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③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들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 ④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21.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가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공소장변경 등의 절차에 의하더라도 그 공소가 유지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③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④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면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관할위반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물관할의 유무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하고 공소장이 변경되면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한다.

22. 유죄 또는 무죄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선고유예 판결에서는 그 판결 이유에서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 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그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 ㄷ.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판결이유에 기재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인들의 증언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
- ㄹ. 피고인이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의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에는 형의 필요적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뿐만 아니라 형의 감면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경우도 포함된다.

- ① ㄴ ② ㄱ, ㄴ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23.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항소법원의 소송계속은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에 의하여 사건이 이심된 때로부터 그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거나 그 판결이 확정되는 때까지 유지된다.
- ②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상고제기 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없이 상고취하를 하였다면 친권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이 없다.
-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의 교체가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정으로 이루어진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새로이 선정된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이다.
- ④ 검사는 반대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 그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지만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재판의 이유만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항소법원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24. 일부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고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 ② 원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각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한 경우,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무죄부분만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 ③ 재판 가운데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해서만 상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상소로서, 그 부분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 ④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함께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 ⑤ 상소장의 불복범위란에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상소한다’는 기재가 없는 한 검사의 청구대로 되지 아니한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5.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된다.
- ②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그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는 것이다.
- ③ 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소송당사자에게도 사실조사신청권이 있다.
- ⑤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경 제 학 】

1. X재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은 각각 $Q^D = 300 - P$, $Q^S = 2P$ 이다. 균형가격 P^* 와 균형거래량 Q^* 는? (단, Q^D , Q^S , P 는 각각 X재의 수요량, 공급량, 가격을 나타낸다.)

	P^*	Q^*
①	50	250
②	50	100
③	100	200
④	150	150
⑤	150	300

2. 완전경쟁시장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래되는 재화는 동질적이다.
- ②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가격수용자이다.
- ③ 시장 진입은 자유롭지만 이탈은 자유롭지 못하다.
- ④ 시장 참여자는 재화에 관한 완전한 시장정보를 갖고 있다.
- ⑤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시장가격 수준에서 수평선 형태를 갖는다.

3. 두 재화 x , y 를 소비하는 한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x, y) = \min\{3x, y\}$ 이다. 이 소비자의 소득이 50이고, 재화 x , y 의 가격은 각각 2, 1이라 할 때, 이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묶음 (x^*, y^*) 는?

- ① (5, 40) ② (10, 30) ③ (15, 20)
- ④ (20, 10) ⑤ (25, 0)

4. 두 기간($t=1, 2$)의 소비 (C_1, C_2) 를 통해 효용 $u(C_1, C_2) = \sqrt{C_1 C_2}$ 을 극대화하는 소비자가 있다. 이 소비자의 소득은 $(M_1, M_2) = (Y, 0)$ 이고, 시장이자율은 r 로 주어져 있을 때, 이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소비점 (C_1^*, C_2^*)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C_t 와 M_t 는 각각 기간 t 의 소비와 소득을 나타내며, Y 와 r 는 양(+의) 상수이다.)

- ① $C_1^* = C_2^*$ 이다.
- ② $C_1^* = Y/2$ 이다.
- ③ C_1^* 와 C_2^* 모두 양(+의)이다.
- ④ r 가 높아지면 C_2^* 도 높아진다.
- ⑤ $C_1^* + C_2^*/(1+r) = Y$ 가 만족된다.

5. 두 시장 A, B의 수요가 각각 $Q^A = 1/P$, $Q^B = 1/P^2$ 이다. 시장가격이 상승할 때, 시장 A와 B에서 판매액의 변화는?

	A	B
①	변화 없음	변화 없음
②	변화 없음	감소
③	증가	변화 없음
④	감소	증가
⑤	증가	감소

6. 시장 수요가 $Q^D = 100 - P$ 로 주어진 X재 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독점기업 A의 평균비용이 모든 생산량에서 20으로 같다. A의 독점이윤 π^m 과 시장의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 L^m 은? (단, Q^D 와 P 는 각각 X의 수요량과 가격을 나타낸다.)

	π^m	L^m
①	800	800
②	1,600	800
③	800	1,600
④	1,600	1,600
⑤	2,400	1,600

7. 수요곡선이 $Q=340-P$ 인 X재 시장에서 두 기업이 쿠르노 경쟁(Cournot competition)을 하고 있다. 두 기업 모두 한계비용이 40일 때, 시장의 균형가격은? (단, P 는 X재의 시장가격이고, Q 는 두 기업의 생산량의 합이다.)

- ① 40 ② 100 ③ 140
④ 240 ⑤ 300

8. 정부는 한 독점시장에서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의 생산량이 거래되도록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 시장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독점기업의 한계비용곡선이 우상향할 때, 이 규제 정책의 조건은?

- ① 평균수입 = 한계비용
② 평균수입 = 평균비용
③ 한계수입 = 한계비용
④ 한계수입 = 평균비용
⑤ 한계수입 = 총비용

9. X재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은 각각 $Q^D=300-4P$, $Q^S=20+10P$ 이다. 정부는 15에서 가격상한을 설정하고 생산자에게 생산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공급량과 수요량을 일치시키려 한다. 이때 정부가 지급하는 X재 한 단위당 생산보조금은? (단, Q^D , Q^S , P 는 각각 X재의 수요량, 공급량, 가격을 나타낸다.)

- ① 6 ② 7 ③ 8
④ 9 ⑤ 10

10. 다음은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부호로 옳은 것은?

- 소비에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사회적 한계편익 (㉠) 사적 한계편익
- 생산에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사회적 한계비용 (㉡) 사적 한계비용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1. 양(+)의 네트워크 외부효과(network externality)를 갖는 시장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온라인 게임
② 전기 자동차
③ 명품 핸드백
④ 문서처리 소프트웨어
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12. 소국개방경제인 A국의 X재에 관한 국내 수요와 공급은 각각 $Q^D=180-P/2$, $Q^S=P/4$ 이다. X재의 국제가격이 100일 때, A국 정부가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X재 수입에 대해 단위당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관세 수입은? (단, Q^D , Q^S , P 는 각각 X재의 국내 수요량, 공급량, 가격을 나타낸다.)

- ① 1,600 ② 1,800 ③ 2,000
④ 2,200 ⑤ 2,400

13. 경제활동으로 인해 과도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사회에서, 온실가스 배출량(e)에 따른 사회적 총피해비용은 $3e^2/2$ 이고 총감축비용은 $30e - e^2$ 이다. 사회적 최적 배출량은? (단, $e > 0$ 이다.)

- ① 2 ② 4 ③ 6
④ 8 ⑤ 10

14.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ital Asset Pricing Model)에서 자본시장선(Capital Market Line)의 상수항은?

- ①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② 개별 자산수익률의 표준편차
③ 시장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
④ 시장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표준편차
⑤ 개별 자산수익률의 시장수익률에 대한 민감도

15. 국제수지표의 금융계정(financial account)에 포함되는 거래가 아닌 것은?

- ① 한국은행이 미국 재무성 채권을 매입한다,
② 우리나라 시중은행이 외화자금을 차입한다.
③ 일본 금융기관이 우리나라 국채를 매입한다.
④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불한다.
⑤ 우리나라 기업이 태국 기업의 주식 50 % 이상을 매입한다.

16. 정보에 대해 효율적인 주식시장이 함의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재의 주가는 현재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반영한다.
② 주가는 새로운 뉴스에만 반응하여 변동하므로 예측 불가능하다.
③ 투자자의 최선의 선택은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다.
④ 우량 주식만 매입하는 적극적 펀드의 수익률은 시장수익률보다 평균적으로 높다.
⑤ 일부 주식시장의 투기적 거품 현상은 시장의 효율성이 일시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이다.

17. 수입차 판매 전문회사인 A사가 금년에 생산된 수입 지게차의 가격을 인상하였다. A사의 조치가 금년도 국내의 소비자물가지수(CPI)와 GDP 디플레이터 변동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소비자물가지수(CPI)	GDP 디플레이터
①	하락	상승
②	상승	상승
③	변화 없음	상승
④	상승	변화 없음
⑤	변화 없음	변화 없음

18. 리카도의 대등성정리(Ricardian equivalence)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상소득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② 정부채무는 장래의 조세와 같다.
③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을 가정한다.
④ 소비자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⑤ 현재세대는 미래세대의 후생수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19. 경제성장률이 3 %, 화폐의 유통속도 변화율이 -2%, 화폐공급 증가율이 10 %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율은 몇 %인가? (단, 화폐수량방정식이 성립한다.)

- ① 5 ② 8 ③ 9
④ 11 ⑤ 15

20. 중앙은행이 경기회복을 위해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본원통화의 증가
- ② 재할인율의 인하
- ③ 공개시장에서의 국채 매입
- ④ 민간의 현금/예금 비율 상승 유도
- ⑤ 법정지급준비율의 인하를 통한 실제지급준비율의 하락 유도

21. 다음은 폐쇄경제(closed economy)하에서의 균형 국민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 균형국민소득(Y)은 국민소득의 공급(Y_s)과 수요(Y_d)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이 충분히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소득의 공급(Y_s)에 대한 제약이 없다면, 국민소득(Y)의 공급식은 $Y_s = Y$ 로 규정한다.
- 국민소득의 수요(Y_d)는 소비(C), 투자(I) 및 정부지출(G)의 합계로 규정한다.
- 소비는 소득(Y)에서 조세(T)를 차감한 가처분소득의 함수로 규정한다.

투자와 조세가 각각 20만큼 증가하는 경우, 균형 국민소득의 변동분은? (단, 한계소비성향은 0.6이고, 투자와 정부지출은 외생적으로 결정되며, 그 크기는 각각 500, 300이다.)

- ① 20 증가 ② 30 증가 ③ 50 증가
- ④ 80 증가 ⑤ 변동 없음

22.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기침체 상태에서 발생한다.
- ② 화폐수요는 이자율에 대해 무한 탄력적이다.
- ③ 이자율이 0%에 근접한 임계이자율에서 발생한다.
- ④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다.
- ⑤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존재하는 경우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23.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정책조합으로 옳은 것은?

	재정정책	통화정책
①	세율 인상	기준금리 인상
②	세율 인하	법정지급준비율 인상
③	정부지출 증가	기준금리 인하
④	정부지출 증가	기준금리 인상
⑤	정부지출 감소	법정지급준비율 인하

24. 이자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자율이 상승하면 화폐수요는 감소한다.
- ② 단기이자율이 상승하면 장기이자율도 대체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 ③ 장기이자율은 단기이자율에 비해 유동성프리미엄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
- ④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하여 구할 수 있다.
- ⑤ 채권보유자는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채권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이득을 본다.

25. 원화의 대달러 환율(원/달러)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 다른 것은? (단, 다른 모든 조건은 일정하다.)

- ① 국내 기준금리 인하
- ② 국내기업의 생산성 저하
- ③ 내국인의 해외여행경비 증가
- ④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 ⑤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자금 유입

【 소방학개론 】

1.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 펌프성능시험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	㉡	㉢
①	65	150	140
②	140	65	150
③	140	150	65
④	150	65	140
⑤	150	140	65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중 지정수량이 가장 적은 것은?

- ① 아조화합물
- ② 유기과산화물
- ③ 니트로화합물
- ④ 디아조화합물
- ⑤ 히드라진 유도체

3. 플로팅루프탱크(floating roof tank)의 측면과 굽도리판에 의하여 형성된 환상부분에 포를 방출하여 소화작용을 하도록 된 포소화설비의 고정포 방출구는?

- ① 특형 방출구
- ② I 형 방출구
- ③ II 형 방출구
- ④ III형(표면하 주입 방출구)
- ⑤ IV형(반표면하 주입 방출구)

4. 폭연(Deflagr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충격파를 형성하지 않는다.
- ② 에너지 방출속도가 물질전달속도에 영향받지 않고 매우 빠르다.
- ③ 화염의 전파속도가 음속보다 느린 것을 말하며, 그 화염의 전파속도는 0.1~10 m/sec 정도이다.
- ④ 반응 또는 화염면의 전파가 분자량이나 공기 등의 난류확산에 영향을 받는다.
- ⑤ 화염면에서 상대적으로 완만한 에너지 변화에 의해서 온도, 압력, 밀도 변화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5. 벽의 내화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는 제외한다.)

- ① 벽돌조로서 두께가 19 cm 이상인 것
- ②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 cm 이상인 것
- ③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 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로 덮은 것
- ④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 cm 이상인 것
- ⑤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조로서 두께가 5 cm 이상인 것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두는 조직은?

- ① 안전관리자문단
- ②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③ 안전정책조정위원회
- ④ 중앙긴급구조통제단
- 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 응상폭발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증기폭발	ㄴ. 분진폭발	ㄷ. 분해폭발
ㄹ. 전선폭발	ㅁ. 분무폭발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ㄹ, ㅁ

8. 가연성물질이 되기 쉬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열전도도 값이 작아야 한다.
②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③ 활성화에너지가 크고 발열량이 작아야 한다.
④ 조연성 가스인 산소와의 결합력이 커야 한다.
⑤ 산소와 접촉할 수 있는 표면적이 커야 한다.

9. 우리나라 소방의 시대별 발전과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고려시대 : 금화도감을 설치하였다.	
ㄴ. 조선시대 : 일본에서 들여온 수총기를 궁정소방대에 처음으로 구비하였다.	
ㄷ. 일제강점기 : 우리나라 최초로 소방서를 설치하였다.	
ㄹ. 미군정시대 : 소방을 경찰에서 분리하여 최초로 독립된 자치적 소방제도를 시행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에틸알코올(C_2H_5OH)의 최소산소농도(MOC)는? (단, 에틸알코올의 연소범위는 4.3 ~ 19 Vol%이며, 완전연소 생성물은 CO_2 와 H_2O 이다.)

- ① 8.6 ② 10.8 ③ 12.9
④ 15.1 ⑤ 17.2

11.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으로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 ① 문화재
② 판매시설
③ 의료시설
④ 장례식장
⑤ 위락시설

1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상 중증도 분류별 표시방법으로 옳은 것은?

- ① 사망 : 적색, 십자가 표시
② 긴급 : 녹색, 토끼 그림
③ 응급 : 적색, 거북이 그림
④ 비응급 : 녹색, 구급차 그림에 × 표시
⑤ 대기 : 황색, 구급차 그림에 × 표시

13. 다음은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 기준에 관한 것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교류 (㉡)볼트 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것으로 할 것

	㉠	㉡	㉢
①	단상	24	1.5
②	단상	220	1.5
③	단상	380	3.0
④	3상	220	3.0
⑤	3상	380	3.0

14.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부착 높이에 따른 감지기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부착 높이 4m 미만: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ㄴ. 부착 높이 4m 이상 8m 미만: 정온식 감지선형 1종 감지기
 ㄷ. 부착 높이 8m 이상 15m 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ㄹ. 부착 높이 15m 이상 20m 미만: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 | | | |
|-----------|-----------|--------|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 |

1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ㄴ.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ㄷ.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15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ㄹ.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ㅁ.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대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ㄴ.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ㄷ.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ㄹ.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ㅁ.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영

- | | | |
|--------|-----------|--------|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 ④ ㄹ, ㅁ | ⑤ ㄱ, ㄹ, ㅁ | |

17. ㉠~㉤의 물질을 인화점이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 | | |
|----------|---------|
| ㉠ 아세톤 | ㉣ 글리세린 |
| ㉡ 이황화탄소 | ㉤ 메틸알코올 |
| ㉢ 디에틸에테르 | |

-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⑤ ㉢ - ㉡ - ㉠ - ㉤ - ㉣

18. 수성막포 소화약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불소계 계면활성제를 주성분으로 한 것으로 안정성이 좋아 장기보존이 가능하다.
 ㄴ. 알코올류, 케톤류, 에스테르류 등과 같은 수용성 위험물 화재에 소화적응성이 아주 우수하다.
 ㄷ. 내유성이 있어 탱크 하부에서 발포하는 표면하 주입방식이 가능하며 분말소화약제와 함께 사용 시 소화능력이 강화된다.
 ㄹ. 유류의 표면에 거품과 수성막을 형성함으로써 질식과 냉각 소화 작용이 우수하며 ‘라이트 워터(Light Water)’라고도 불린다.

- ① ㄱ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위험물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화성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②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③ 유황은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순도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황석 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④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구리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마그네슘분·니켈분 및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⑤ “제3석유류”라 함은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20.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에서 피난기구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②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 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③ 다수인 피난장비는 사용시에 보관실 외측 문이 먼저 열리고 탑승기가 외측으로 자동으로 전개될 것
 ④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 및 보 등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 및 용접 등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⑤ 4층 이상의 층에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21. 열에너지원의 종류에서 화학열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분해열	ㄴ. 연소열
ㄷ. 압축열	ㄹ. 산화열

- ① ㄹ
② ㄱ, ㄴ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22. 다음 중 위험도(H) 값이 가장 큰 것은? (단, 1기압, 25℃ 공기 중의 연소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 ① 수소
- ② 메탄
- ③ 아세틸렌
- ④ 이황화탄소
- ⑤ 산화에틸렌

2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50만 배인 사업소의 경우,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수로 옳은 것은?

	화학소방자동차	자체소방대원
①	1대	5인
②	2대	10인
③	3대	15인
④	4대	20인
⑤	5대	10인

2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의 품명 및 수량으로 옳은 것은?

- ① 냉매 : 500킬로그램 이상
- ② 사류 : 1,000킬로그램 이상
- ③ 면화류 : 100킬로그램 이상
- ④ 가연성고체류 : 2,000킬로그램 이상
- ⑤ 석탄·목탄류 : 3,000킬로그램 이상

2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시·도 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해야 하는 지역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시장지역
ㄴ.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ㄷ.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ㄹ.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